

이상민 장관 “센터 운영 지장 없게 재정당국과 협의”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방문
강 시장 “전액 국비 운영” 요청
“마음의 상처 치유 국가 의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주에 있는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를 방문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라우마센터 운영비용 중 국비의 비중을 높여준다는 뜻으로 해석돼 광주시는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시장 광주시장은 트라우마센터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센터 운영에 정부 책임을 부여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지난 7월 트라우마센터 개소 당시 “트라우마센터는 국가폭력 생존자와 가족이 심리적 고통을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를 치유하는 공간인 만큼 온전히 국비로 운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가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는 트라우마센터가 국립 시설이고,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치유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광주 서구 화정동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방문해 강시장 광주시장과 내부시설을 둘러보고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양배 기자

는 공간인 만큼 정부에 ‘전액 국비 운영’을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 협력을 통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 필요

성을 설명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트라우마센터를 찾은 이 장관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치유센터 시설을 둘러봤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한국전쟁과 5·18, 민주화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아직까지도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고 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

고 건강한 삶의 회복이 국가의 의무이다”며 “개관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관했고, 앞으로 부족한 재원은 행정안전부가 재정당국과 꾸준히 협의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과 이 장관은 시설을 둘러보며 원예치유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는 내담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의견을 들었다.

한 내담자는 “국가가 준 상처를 국가가 직접 치유해주시니 트라우마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며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많이 내려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유센터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폭력 등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가 설립했다.

총 사업비 107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2,224㎡) 규모로 올해 7월 개관했다. 현재 치유센터는 국비 8억 1500만원, 광주시 출연금 5억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 신산업 육성, 국토종합 수정계획 반영해야”

전남연구원, JN1 이슈리포트 발간

전남의 초광역권 발전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공간전략 수립, 지방시대 4대 특구 중심의 융복합 거점 조성 등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1일 ‘JN1 이슈리포트-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에 따른 전남의 방향’을 발간, 국토의 장기 발전구상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법적 재검토 시기가 도래함에 따른 전남 중심의 초광역권 구축과 거점 간 연계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의 수정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도입 등 교통망 변화와 같이 급변하는 국토 여건을 반영함과 동시에 도시, 교통망 등 하위 계획의 뚜렷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수정계획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춰 전남 또한 지방시대계획 등 타 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분야별 발전 방향을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 대전환 정책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교통망 구축 △지방시대 4대 특구 중심의 ‘기회의 땅 전남’ 조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이 시급하다.

전남연구원은 전남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의 가장 큰 변화인 초광역권 발전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과 연계해 전남의 3대 주력산업 및 코어산업 중심의 ‘핵심 거점’과 생활권 단위의 ‘부거점’ 등을

설정한 공간구조 거점 간의 연계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인구·산업거점, 생활인프라, 교통 및 물류 현황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초광역권 공간구조(거점화 및 연계현황 등)제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 신산업 육성 선도를 위한 지방시대 4대 특구 중심의 융복합 거점 조성 방향으로 △엔지니어링 유치 및 바이오&에너지 등 유망산업 추가지정 (기회발전특구) △나주(에너지 중심 혁신도시형), 영암·강진(미래 농생명산업형) 등 지역적·산업적 특성과 연계한 종합지원정책 마련 (교육발전특구) △나주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전남의 다양한 혁신자원과 광주 도심융합특구의 기능적 연계 강화 (도심융합특구)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된 순천, 진도 등 문화지역 연계 (문화특구) 등을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거점 육성을 위해 국가 주요 국가교통망 계획과 연계해 속도 무제한 영암·광주 미래형 초고속도로, 고흥·광주 우주고속도로, 여수·순천 고속도로 추진 계획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권역별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구현 전략으로 다도해 선사인웨이인 여수~남해 해저터널 및 여수 금오도 연도교, 압해·화원 및 화태·백야 연륙·연도교 구축을 통한 섬 주민과 관광객 편의 증진도 제안했다.

전남연구원 최우람 책임연구원은 “기존 국토종합계획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등 주요 국토-환경 이슈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생태용량 확대, 통합 물관리 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특광역시 최초 ‘직원 당직제’ 폐지

8월부터 ‘AI당지기’ 특별채용
재난안전상황실과 통합 운영
“혁신사례로 능률 향상 기대”

광주시가 개정 이래 쪽 진행해 오던 ‘직원 당직제’를 8월부터 폐지한다. 사람이 당직을 서던 자리에는 ‘인공지능(AI) 당지기’를 특별채용하고 당직 전담인력을 확보해 24시간 운영하는 재난안전상황실과 통합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실시 후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AI 시대에 발맞춰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직원 당직제’를 폐지, 뜨거운 안녕을 고했다.

당직근무 폐지는 야간·휴일에 접수되는 당직민원 대부분이 긴급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민원 또는 타 기관 소관인 이첩민원인 데다, 당직근무 다음날 휴무에 따른 불가피한 업무공백의 발생으로 행정 능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개선 대책이다.

실제, 지난해 당직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전체 1592건으로 일평균 4건에 불과했다. 이 중 약 86%인 1376건이 교통 및 주

취차 불만사항 등 단순민원이거나 타 기관 소관인 이첩민원이었다.

이 같은 단순민원 해결을 위해 직원 3~4명이 일·속직 당직근무를 하고 다음날 휴무하게 돼 업무공백 발생 등 행정능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직원 당직제를 폐지하는 대신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재난안전상황실에 당직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해 통합 운영한다. 긴급·비상상황 시 재난·안전 대응 인력과 당직인력이 유기적으로 대응해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장점도 기대된다.

특히 단순·이첩 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AI 보이스봇인 ‘당지기’를 특별채용했다. ‘AI 당지기’는 실시간으로 민원을 자동접수(음성·보이스ARS)한 뒤 5개 자치구, 종합건설본부 등 해당 민원 처리기관을 연결하거나, 담당부서에 전달해 응대할 수 있도록 한다.

광주시는 AI 보이스봇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통화내용, 통계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당직근무 폐지는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업무에 대해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지

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한 AI시대 혁신사례로 꼽힌다. 이에 따라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당직제 폐지 첫날인 1일 오전 8시30분, 강시장 시장과 마지막 당직 근무자들은 시청 1층 당직실 앞에서 ‘당직, 뜨거운 안녕’이라는 작은 행사를 진행했다. 강 시장은 마지막 근무자들과 소회를 나누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강 시장은 시민안전을 위해 수십년간 성실히 당직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노란색 월급봉투에 당직수당을 전달했다.

강 시장은 이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AI 보이스봇인 ‘당지기’ 시연 등 통합 당직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근무자들에게 당직 민원 처리와 재난·안전 대응업무 철저히 행을 당부했다.

강시장 광주시장은 “이번 당직제 변화는 지난 2년여 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출한 결과물이다. 그동안 고생해준 전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불요불급한 업무개선은 조직의 작은 변화이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이러한 변화는 공직자의 존재 이유인 시민행복과 광주의 더 큰 변화를 위한 혁신의 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 “정부의 신규댐 건설사업 환영”

“건설 차질없도록 협력할 것”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환경부의 신규댐(리모델링) 건설사업 후보지에 주암보조댐(화순군 동북천댐) 신규 1곳과 도내 기존 저수지 증설 2곳 등 총 3곳이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1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

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역대급 가뭄과 호우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규 댐 건설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앞으로 댐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댐 건설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마련과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에선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구례 하천제방 범람, 2022년 281일 동안 이어진 극한 가뭄, 2023년 장마철 역대 최고 강수량 기록 등 최근 3년 동안 극심한 기후양극화를 겪었다.

전남도는 향후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주민지원 대책, 안개 및 서리 피해, 재산권 행사 제한 및 각종규제 등 완화에도 환경부와 협조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환경보전 측면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시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최동환 기자

